



조간 제 800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음력 12월 2일)

9200여 기업이 떠 받치는 산단, 지역 성장엔진 살린다



광주·전남 산업단지 대체부
(1)프롤로그

121곳서 16만명 종사…전체 분양률 97% 넘어
분양·가동지표는 안정적이지만 산업 재편 더뎌
노후·고밀·집중구조 속 확장성·유연성 시험대

광주·전남 산업단지는 외형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광주는 노후·고밀·집중 구조 속에서 전환의 여지가 제한되고, 전남은 국가산단 중심의 산업 쏠림 구조가 지속 가능성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광주·전남 산업단지 대체부’ 연중기획을 통해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와 변화 가능성, 업종 체계를 들여다보며 지역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광주·전남 산업단지는 오랫동안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공장이 들어서고 물류가 오가며 산업 단지는 성장 무대로의 기능을 했고, 산업 단지의 확장은 곧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다르다. 분양률과 가동률만 놓고 보면 산업단지는 이미 충분히 체워진 공간에 기깝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산업 구조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이 동시에 드러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산업단지의 총 관리면적(지난해 6월 기준)은 3005만2000㎡다. 국가산단지 2곳, 일반산업단지 8곳, 도시첨단산업단지 1곳, 중소협력단지 1곳, 농공단지 1곳 등 총 13개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는 1525만9000㎡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공장 설립 수는 5236개사, 이 중 가동 중인 공장은 4759개사다. 휴업은 9개사, 건설 중인 공장은 449개사, 미착공 상태는 19개사다. 산업단지 종사자는 7만3065명이다. 생산 규모는 5397억7000만원이며, 수출 규모는 402억4300만 달러로 501억 달러를 수출은 402억4300만 달러다.

승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여의도포커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면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과 전남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합동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교육감, 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광주 동구청장(사진 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의 장 열렸다…찬성 속 우려도

광주 동구·전남 영암서 첫 공청회…시·도민 의견수렴
공공기관 2차 이전·대형 프로젝트 유치 등 질문 잇따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공청회가 19일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에서 각각 처음으로 열렸다. ▶관련기사 2면

이 자리에서는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질문부터 농어촌지역 소외 우려, 주민투표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이날 오전 전남 영암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준호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영암군 도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주민, 사회단체, 농업

정의 체급을 키우는 일’로 요약했다.

김 지사는 “행정 경계를 허무는 건 목적 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도민이 불안해하는 손해 가능성은 제도 장치로 막고, 통합으로 늘어나는 재정 여력을 균형발전과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법이 정한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중심”이라면서도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 공론을 충분히 모으고 필요하면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농어촌 생존’과 ‘난개발’ 문제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다. 한 참석자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태양광·풍력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농민 소득과 피해 보상, 부채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농사와 에너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영농형 모델처럼 농민 땅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지역 환원 땅을 키우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우려

전라권 지자체 78.6% “지방소멸 위험 심각”

최대 원인은 일자리 부족…베이비부머 취업·귀촌 연계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 및

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가장 많은

85.7%의 응답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가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의 점수가 낮았다.

비수도권 지자체 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면에 계속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